

‘국토교통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 연평균 950건

국토부 766건 등 최근 5년 4천778건 발생

산하기관 상당수 국가보안관제와 미연동

조인철 “국민 일상 직결…사각지대 없어야”

철도·도로·공항부터 주택정보까지 국민 일상을 떠받치는 국토교통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공격 시도가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 9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부와 국가보안관제체계가 적용된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4천778건으

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1건, 2022년 989건, 2023년 812건, 2024년 1천19건, 2025년 957건으로, 최근 5년 연간 800~1천건 안팎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졌다.

공격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위·변조(웹취약점)’ 유형이 2천609건으로 54.6%, ‘단순 침입시도’가 1천902건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 탐지 건수의 94.4%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7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655건, 한국철도공사 579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57건, 한국도로공사 461건 순이다.

이들 기관은 주택·부동산 정보와 철도·도로, 국토교통 R&D 등 국민생활 및 국가 기반시설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란 점에서 단순히 행정 전산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 기반시설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한국철도공사와 통합된 SR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R의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29건, 2024년 97건, 2025년 175건으로, 2021년 대비 2025년 탐지 건수가 약 7.6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매년 1천건 안팎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국가보안관제 체계에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은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부문·단위 보안관제센

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제는 사이버공격을 상시 탐지하고 분석·대응하기 위한 핵심 체계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국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자동차순해보험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11곳(35.5%)이 미연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기관은 국가보안관제 연동계획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부가 예산·

인력·시스템 구축 등 기관별 애로사항을 점검해 실제 연동까지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출퇴근길의 철도와 도로부터 공항, 주택과 공간정보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시스템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며 “매년 1천건 안팎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탐지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3곳 중 1곳이 국가보안관제에 미연동된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련된 연동계획이 실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11개 미연동 기관의 예산·인력·시스템 여건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철도·도로·공항과 주택·공간정보 어느 곳에도 사이버보안의 빈틈이 남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상관보림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

여야, ‘호남 반도체’·‘대미투자 보고유출’ 신경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서 설전

여야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내용 유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호남반도체 투자 관련 핵심 증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맹탕 청문

회’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관련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

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진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대미투자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해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 본격화

울촌·세풍·해룡 등 6개 산단 645만평

2036년까지 민간투자 5조3천724억

특별시·광양시·의회 참여 상시 TF 구축

권향엽 “기업 투자 지역 성장으로 연결”

광양만권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가운데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 5일 광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양시의원, 광양시관계부서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울촌1·세풍·해룡·황금·광양익신일반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등 6개 산업단지, 약 2천132만㎡(645만평) 규모로 지정됐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5조3천72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화단지에는 기초원료·핵심소재·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광양이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핵심광물과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등 미래첨단산업으로 산업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이차전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획된 투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 의회,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TF)를 구축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투자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R&D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의원은 “광양의 강점은 단순히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에서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항만·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주·포항·세미금·울산과 차별화되는 광양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필요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미래산업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